京鄕新聞
발행인 鄭九鎬 / 편집인 車鍾晟 / 인쇄인 車鍾晟
주필 尹相哲 / 편집국장 張明錫
서울특별시 中區貞洞 22 【郵便番號 100】
교환대표 (720)5151·6151
편집국 (723)9855·9856
광고접수 (723)8541·8542
구독신청 (722)2227·9090
구독료 월정 2,700원 / 1부 130원
본사는 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등가구전문점 木林彦 ☎(568)1895 ●한국라탄직매장● 영등시장내거리

井州·安城·寧越·槐山·靑松·瑞山·康津

定住生活圈 7곳 示範개발

生計·敎育등의 綜合기능 醫療·慰樂시설등도 完備

內務部, 全國 28곳으로 擴大개발

내무부는 10일 경기도 {정왕동(이상행정지역)/검암동(이상산업지역)} 경북 {점촌(상업지역)/문경(공업지역)} 전남 {광양(공업지역)/여천(공업지역)} 충북 {제천(상업지역)/충주(공업지역)} 전북 {이리(상업지역)/군산(공업지역)} 경남 {삼천포(공업지역)/진주(상업지역)} 등 7개 시·군을 정주생활권(定住生活圈)시범지역으로 선정, 개발하기로 했다.

내무부는 이들 7개 시범지역개발에 올해 28개 정주생활권(지도)으로 구획할 방침이다. 정주생활권은 일정지역에 행정·경제·사회·문화등 종합기능을 갖추게 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그지역을 떠나지않고도 생활환경을 누리며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정착시키는 것을 말한다.

내무부의 정주생활권개발계획에 따르면 이 {동단위 또는 읍·면단위에는 일상생활을 위한 1차적 기본수요와 영농·협동생활권을 갖춘 마을권을 형성하고 읍·면단위에는 몇개 시·군과 연계하여 1시간 거리내에 있는 2차 기본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읍·면권을 시·군단위에는 경제·사회·문화적활동의 중심기능과 정보·교통·유통등 {광역시설을 갖춘 지역으로 육성, 도시와농촌간 균형있는 생활권을 형성, 도시인구의 {분산을 유도하는 한편 이들 지역을 {연결, 하나의 권역으로 묶게된다.

즉 이·동단위가 마을권을 형성하고 마을권이 읍·면권으로, 읍·면권이 시·군의 지역생활권을 형성, 이지역 안에 교통통신·상업유통·교육문화·사회복지와 각종 스포츠시설등을 갖추도록 한다는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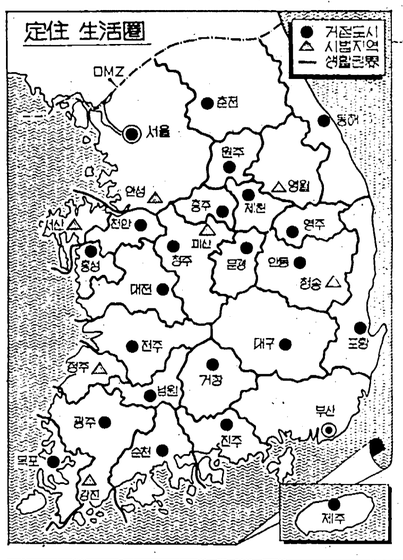
이에따라 마을권에는 1{동사무소·노인정·탁아소·공동작업장·간이운동장 {등이 들어서게되며 읍·면권에는 우체국·전기사업소·연쇄점·신용금고·중·고교·의원·보건소·농협지점·{농기계센터·결혼식장·소방서 {등이 들어서게된다.

그리고 이지역의 핵이 되는 정주생활권에는 교통통신의 편의를 위해 각지방 {도로망과 종합터미널, 시내버스, DDD전화를 가설하고 상업유통단지로 상설시장, 백화점, 슈퍼마켓, 은행지점, 유흥시설등을 갖추게된다.

교육문화시설로는 전문대학 1{개학교 도서관과 사회교육시설로는 종합병원 보건소 직업보도소와 스포츠센터, 여가시설로는 공원 {설로동장 유원지등을 갖추게된다.

정주생활권은 일단 79년부터 「제6차전국총合개발계획」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데 일본에는 현재 2백~3백개의 정주권이 설정되어있다.

정주생활권의 중심이될 28개 성장거점도시는 다음과 같다. ▲서울▲인천▲수원▲춘천▲동해▲영월▲안성▲서산▲천안▲청주▲충주▲제천▲전주▲정읍▲남원▲광주▲목포▲강진▲순천▲대구▲분경▲영주▲안동▲부산▲진주▲지창▲제주



部處인사交流 대폭「擴大」

올해 5百~6百명 民願·小職列등에 重點

정부는 행정부처간 공무원인사 교류의 인력과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한편 인사교류 심의위원회의 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총무처장관은 10일 「지난해 실시한 부처간인사교류가 좋은 반응을 얻고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올해부터 이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고 말하고 『우선 교류규모는 민원부서와 縮少 및 小廳列에 중점을 두되 지난해 2백20명에서 5백~6백명으로 2배이상 늘려갈 {것이다고 밝혔다.

이 달부터는 「공무원임용법」에 따라 5급이상 공무원은 3{년이 초과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6년이하의 일정기간 {동안 동일직위에 근무하도록 한 규정이 적용되어 {이들 직위에 대한 교체인사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즉 이들 직위에 대한 인사는 {종전처럼 부처별로 실시하지 않고 총무처가 {부처간 인사교류를 위해 {직접 또는 부처별 인사교류 {계획을 승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달부터 시행될 「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5급이상 {공무원은 부처간 인사교류 {대상자로 선정되면 {반드시 응하도록 되어있다.

이와관련, 총무처는 지난 {연말 각부처로부터 교류 {희망자를 접수, 교류대상자 {선정을 끝내고 이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총무처는 또 「지난해의 {중앙과 지방관련부서, 중앙 {부서상호간 교류에서 올해 {에는 정책과 집행부서, 종합 {행정기관상호간및 여산·법제·세무등 부처공통업무분 {야별 교류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하고 「인사교류심의위의 {기능을 강화, 이위원회에서 교류시기와 규모, 대상자 선정기준등을 결정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해의 교류실적을 {보면 교류희망자 2{배이상 {증가, 공업진흥청·최 {고검찰청·국립지리원·제1차 {산업선교회 등 {중앙행정기관과 {시·도간 교류가 {활발했다」고 {말했다.

韓·日, 經協 文書化 싸고異見

나까소네 來韓앞두고 막바지 折衝難航

한·일양국은 나까소네(中曾根康弘)일본수상의 {방한을 계기로 {40억달러 {規模의 {기존 {경협과 {별도로 {추가 {경협을 {문서화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막바지 {절충을 {벌이고 {있다.

한 양국의 기관장회담 {수석대표인 나까소네(中曾根)일본수상의 {친서로 표시하는데만 의견의 접근을 {보았을뿐 {문서로 {합의하는 {문제는 {아직 {타결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일본측은 {경협의 {문서화를 {한국의 {국내사정상 {어렵다는 {입장이 {강경, {문서화 {문제가 {최종적으로 {타결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있다.

한편 {한국측은 {경협의 {문서화 {문제가 {나까소네수상의 {방한에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동시에 {새로운 {한·일관계 {설정이라는 {역사적의미를 {더욱 {크게하는것 {이기때문에 {이를 {양국의상 {쌍방의 합의의사록등 {쌍방간의 {문서로 {명시하고 {주권국가간의 {합의에 {기속으로 {남기야 {한다는 {입장이 {강경하다.

그러나 {한·일양국은 {경협의 {문서화 {문제가 {나까소네수상의 {방한에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꺼리고 {있